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35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7. 29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제4호 중 “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”를 “사용료·수수료·지방세”로 한다.

제155조를 삭제한다.

제15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”을 각각 “사용료 또는 수수료”로 한다.

제157조제1항 중 “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”을 “사용료 또는 수수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“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”을 각각 “사용료 또는 수수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”을 각각 “사용료 또는 수수료를”로 한다.

제178조제2항 중 “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”을 “사용료 또는 수수료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담금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분담금

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1. ~ 3. (생 략)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<u>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· 지방세</u>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. ~ 11. (생 략) ② (생 략)	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사용료 · 수수료 · 지방세</u> ---- ----- ----
제155조(분담금) 지방자치단체는 <u>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</u> <u>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</u> <u>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</u> <u>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</u> <u>징수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<u>사용료 · 수수료 또는 분담금</u>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 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 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	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<u>사용료 또는 수수료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

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-----.

② -----
--- 사용료 또는 수수료 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-----
-----.

② 사용료 또는 수수료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<p>④ <u>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</u>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</u>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<u>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</u>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178조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 ① (생략)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<u>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</u>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④ <u>사용료 또는 수수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<u>사용료 또는 수수료를</u> ----- ----- <u>사용료 또는 수수료를</u> ----- -----.</p> <p>제178조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사용료 또는 수수료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47조(지방의회의의결사항)제1항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 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2	제155조(분담금)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 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3	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제1항·제2항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 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4	제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 신청)제1항·제2항·제4항·제7항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 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5	제178조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제2항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 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47조(지방의회의의결사항)제1항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2	제155조(분담금)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3	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제1항·제2항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4	제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 신청)제1항·제2항·제4항·제7항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5	제178조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제2항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
2. 상세 사유

- 현재 5개 지자체*에 분담금 근거 조례가 있으나 부과 실적 없음.
* 강원 원주시·태백시(농공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분담금), 경북 김천시(치수산업 분담금), 전남 장흥군(시장 시설 분담금), 서울 노원구(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)
- 대통령 주재, 「비상경제 민생회의」에서 ‘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’ 발표, 지방자치법 상 ‘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정비(폐지) 내용 포함

Ⅲ. 부대의견

- 해당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·국장
	김선희	정유근	김성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선희	044-205-3875	shnnkm1@mail.go.kr